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 해양수산부 | 보 도 자 료 | | 바다를 통한 국민의 꿈과 행복 실현 |
|---|---|---|---|
| | 배포 일시 | 2014. 2. 17(월)<br>총 12매(본문 12, 별첨) | |
| 담당 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 담 당 자 | • 담당관 김준석, 사무관 구도형, 주무관 장기영<br>• ☎ (044) 200-5121, 5122 |
| 보 도 일 시 | | 2014.2.19(수) 업무보고 시작(10:00)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국민과 함께 가는 행복의 길,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 - 2014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

### ① 유라시아 新물류 루트 확대

- 러시아 극동 5대 항만 현대화·민관 합동 시장조사, 한·몽골 해운합작회사 광물자원 국내운송('14하)

### ② 잊어버린 영토, 섬 되찾기

- 독도와 백령도 인근 해역의 물개복원 등 해양환경보호 강화
- 23개 영해기점도서에 영구시설물 설치, 무인도서 유형별 관리 강화

### ③ 도서민 삶의 질 제고

- 소규모 도서 기항지 시설개선, 도서민 여객 및 차량운임 지원
-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어가수 : 7,145 → 23,704, 지역 30 → 8km)

### ④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바다

- 소형선박 전용 항법어플 '따라와' 개발·보급, 유류부두 경보발령시스템 구축, 도선사 면허 개편

### ⑤ 해운항만산업 재도약

- 해운보증기능 도입 추진, 톤세제 연장 협의, 신규 회사채 발행 지원
- 노·사 중심의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검토, 해양대 정원 확대

### ⑥ 바다 녹화와 명태 살리기

- 여의도 면적 8배 바다숲 조성(제2 산림녹화사업), '17년까지 연근해 자원 1천만톤 회복
- 명태살리기 등 국민생선 회복 프로젝트 추진

□ 해양수산부(차관 손재학)는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함께 '14.2.19(수)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14년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회"에서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5대 중점과제 추진에 매진하기로 하였다.

□ 5대 중점과제 실천계획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Ⅰ. 글로벌 해양경제 영토를 개척하겠습니다.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복합물류네트워크(대륙철도-극동항만-국내항만) 구축 및 극지 영향력 확대**

- **러시아 극동 5대 항만 현대화 타당성 조사 지원, 물류단지 조성 계획 수립(한국기업 클러스터화), 민관 합동 현지 조사단 파견**
-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전문인력 양성 등 북극항로 상용화 기반 마련, 제2쇄빙연구선 타당성 검토 추진**

○ 해상운송·항만과 연계한 복합물류체계를 강화하여 유라시아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극지 영향력 확대를 추진한다.

- TPP 등 메가 경제블럭이 형성되는 태평양, 최대 경제권으로 부상하는 동북아, 새로운 물류 루트로 주목받는 북극항로를 통합하는 新해상 물류계획을 수립하여 대륙철도, 극동항만, 국내항만을 잇는 복합물류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 극동 러시아 지역은 한-러 항만개발협력 MOU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항만건설·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러시아 극동 5대 항만 현대화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한 물류단지 조성 추진 등을 통해 세계 물류시장의 28%를 차지하는 유라시아 시장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아시아-유럽간 新 물류루트로 주목받고 있는 북극항로도 작년 시범 운항 성과를 기반으로 상용화에 대비한다. 우선,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선사의 국내 항만 입출항시 항만시설사용료 50%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극지운항 인력양성, 극지 운항선박 안전기준 마련 등을 통해 新 항로 활용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 <러 극동 5대 항만> | <북극항로 상용화 기반 마련> |
|---|---|
| | |



- 아울러,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완료에 따라 기초과학·융복합 연구활동을 확대하고 아라온호에 이어 제2쇄빙연구선 건조 예비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 분야 우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수주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 항만 개발협력 사업 旣 지원국 중 본사업 발주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을 구성·파견하고, 태풍·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필리핀 방재시설 타당성 조사 실시 등 항만 뿐만 아니라 방재시설, 해양플랜트, 항만운영 등으로 협력사업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 또한, 풍부한 자원과 수송 요충지로 국내 기업의 관심이 높은 흑해 연안국 조지아와의 해운협정 체결, 터키·아제르바이잔과의 해운협력을 추진하고, 일본-대만 항로 개방, 인도의 해운소득 과세방식 개선 등 국적선사의 애로사항 해결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해외 수산자원 확보 적지 조사 및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우리 수산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나가고, 해외 신어장 조사 및 극지역 수산자원에 대한 공동연구도 시행할 계획이다.

## Ⅱ. 바다와 연안, 도서를 국민의 행복한 삶터로 만들겠습니다.

**◈ 도서의 전략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서민 행복과 국민 자긍심을 고취**

**- 도서종합관리방안 수립, 영해기점 도서에 영구시설물 설치, 백령도·독도의 물개 등 해양생물 복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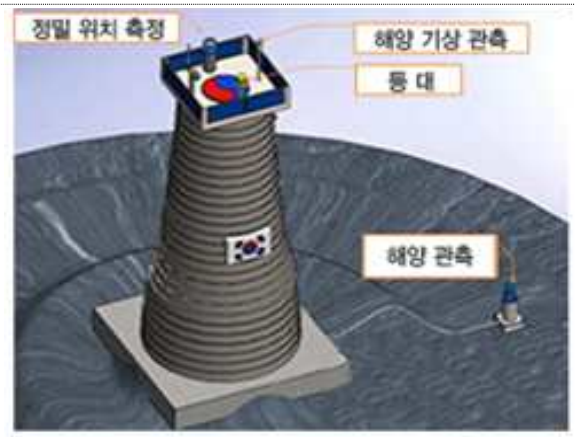
**- 소규모 도서 접안시설 개선, 도서민 여객 및 차량운임(신규) 지원,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 확대 등**

○ '잊혀진 영토'인 도서지역에 대한 거주·소득·복지·해상교통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영토와 국가안보 수호의 중추로 관리한다.

- 암초에도 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일본에 비해 우리는 그동안 최외곽 도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고 유인도서가 감소하는 등 도서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 앞으로는 해양영토의 최외곽 첨병으로서 도서와 그 주변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서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23개 영해기점 도서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여 지정학적 중요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무인도서는 절대보존·개발가능 등 유형별 관리기반을 구축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영해기점 설치 영구시설물>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현황>

- 또한, 국토의 끝단에 위치한 백령도·독도의 물개 증식·복원 사업 등 주변해역 해양환경 관리를 강화하여 영토의 실효적 지배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과 생태적 측면에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일반인이 편리하게 해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 무인발권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고, 현행법령상 항만이나 어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항지 정비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 범위를 차량운임까지 확대하고 도서지역에 대한 조건불리 직불제 지원을 확대(어가수 : 7,145 → 23,704, 지역 30 → 8km)하는 등 도서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 연안과 배후지역을 연계한 권역별 통합 관리전략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전략거점으로 육성**

**- 해양산업 육성 클러스터 도입방안 협의·추진, 부산항 컨테이너 허브, 광양항 에너지·복합물류 허브, 울산항 오일허브, 인천항 중국교역 거점 허브 등 항만별 특화개발 지속 추진 및 통항안전성 강화**

○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배후 지역과 연계된 권역별 통합 관리전략을 마련하여 연안을 경제활성화의 전략거점으로 육성한다.

- 항만권역을 해양플랜트, 조선 등 해양수산 거점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한 해양산업 육성 클러스터 도입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생활·문화·친수공간이 어우러진 2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시범 항만 선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항만의 국가·지역산업 지원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선 부산항을 동북아 컨테이너 허브로 지속 육성하고 유류중계기지, 수리조선단지, LNG벙커링 기지 등 원스톱 서비스 항만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며 최근의 선박대형화 추세를 감안하여 해상교통 안전진단을 거쳐 토도 제거 및 항입구 항로폭 확장계획을 수립하는 등 통항안전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광양항은 율촌산단 진입항로 준설 등을 통해 체선율 감소 및 통항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고, 묘도 준설토 투기장을 에너지·물류 복합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울산항은 오일허브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위해요소 발굴·개선을 통해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인천항은 중국 교역 거점항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해 신항 항로 증심(타당성재조사중), 컨 부두 및 국제여객부두를 지속 개발하고,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크루즈부두 임시개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 Ⅲ.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로 가꾸겠습니다.

**◈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생활 밀착형 해양안전 관리체계를 구축**

**- 해양안전 인터넷 방송 실시, 해사안전감독관제 도입, 소형선박 전용 항법어플 따라와 개발·보급**

**- 도선 면허 세분화·갱신제 도입, 유류부두 경보발령시스템 도입**

○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종합대책을 이행하여 현장·생활 밀착형 해양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 선박·시설 안전성 강화, 해상교통 안전문화 조성 등을 포괄하는 해양안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민관합동 점검 TF를 통해 계절별 안전대책을 강화하며, 해양안전 인터넷 방송을 시행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해양사고 원인의 90%가 인적과실임을 고려하여 인적과실 사례를 DB화하여 교육용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사전예방 및 지도감독을 위한 '해사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사고의 20%를 차지하는 5톤 미만 소형선박 사고 저감을 위해 소형선박 전용 항법어플인 '따라와'를 개발·보급하여 비싼 항법장치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안전한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최근 우이산호 유류오염 사고와 관련하여, 송유관 파손시 자동차단을 위한 비상전원 안전설비기준을 마련하고, 유류부두 충돌시 경보발령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도선사의 면허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현재 2단계의 면허체계를 4단계로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 수산물 품질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대에 부응하여 바다에서 식탁까지 수산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

**- (생산) 위생관리 지정해역 세분화 및 대상 확대, 방사능 검사 강화**

**- (유통) 위판장 저온 유통체계 확립, 도매시장 현대화, 이력제 활성화**

**- (판매) 수산식품 안전정보 포털 구축, 수입산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소비촉진 캠페인 어식백세(魚食100세) 전개**

○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위생·안전 강화 요구 증대에 적극 대응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 안심을 제고해 나간다.

- 육·해상 오염원에 노출될 개연성이 있는 생산해역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해역 위생관리 적용 대상을 확대(수출용 → 내수용)하고, 국내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검사횟수(656회 → 700) 및 대상품목(17품목 → 20)을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산지 위판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노량진수산물 도매시장,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 및 수산물이력제를 활성화하여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해 소비자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수산물의 생산·유통 전 과정에 대한 안전·위생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정부 3.0 기반 수산식품안전정보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며, 수산물 안심인증제(1,000개소) 실시 및 소비자단체, 수협 등 생산자 단체와 공동으로 '어식백세' 국민건강 캠페인을 전개하여 수산물 소비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중국어선 불법어업 강력 대처**

**- 불법어업 대응전략 나포 → 퇴거와 나포 병행**

**- 한중 공동 순시·자원조사 이행, 불법조업 감시시스템 구축 등**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불법어선을 나포하는 동안 생기는 경비의 공백을 틈타 중국어선이 우리 수역을 침범하는 실정이었으나, 앞으로는 대응전략을 기존의 나포 단속에서 퇴거와 나포 병행으로 전환하고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을 경계선 중심으로 전진 배치하여 불법조업선의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 합의사항인 양국 공동순시, 준법조업 유인책 제공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서해를 갈등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 Ⅳ. 해양수산업을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바꾸겠습니다.

◈ **해운물류산업의 불황 극복 지원 및 재도약 기반 조성**

**- 해운보증기능 도입추진, 톤세제 일몰 연장 협의추진, 회사채 차환 지원**

**- 부두운영사 대형화 및 경기 연동 임대료 체계 마련, 해양대 증원**

○ 해운과 금융의 융합을 통해 불황 극복을 지원하고 해운물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성장기반을 조성한다.

- 해운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14년 만기가 도래하는 대형선사의 회사채 차환 및 P-CBO를 통한 중견·중소선사의 신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운보증기능 도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14.12월에 일몰 예정인 톤세제의 연장을 추진하는 등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올해에는 해운산업 외화가득액 300억불을 회복하고 '17년까지는 400억불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부두 운영회사의 자발적인 통합시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단일화를 유도하고, 현행 컨테이너 하역요금 신고제의 인가제 전환 등을 통해 항만 하역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한다.

- 이와 함께, 고급 해기인력 양성소인 해양대학교 승선학과 정원을 늘려나가고, 선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사 중심의 선원 퇴직연금 공제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고질적인 선원 구인난을 해소하고 선원들의 복지확충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미래가 있는 수산업 육성**

**- 우량종자 개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전복·해삼 등 고소득 품종의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

**- 자원회복을 위한 바다녹화 사업(제2의 산림녹화사업) 전개**

**- 수출 전략 산업화로 수산식품 한류 붐 조성**

○ 양식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양식기반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대규모 양식단지를 건설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 양식업의 기반이 되는 수산종자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Golden Seed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종자개발을 강화하고 수산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 또한, 신규사업자 진입제한을 완화하는 등 양식 면허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전복·해삼·민물장어 등 고부가가치 품종의 대량생산을 위해 양식섬, 간척지 양식단지, 내수면 양식단지 등을 건설하여 '16년이후 연간 1천억원을 생산해 낼 계획이다.

-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서 여의도 면적의 8배에 이르는 바다숲을 조성하여 "제2의 산림녹화사업"을 전개하고, 국민생선 회복사업인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동해에서 명태도 다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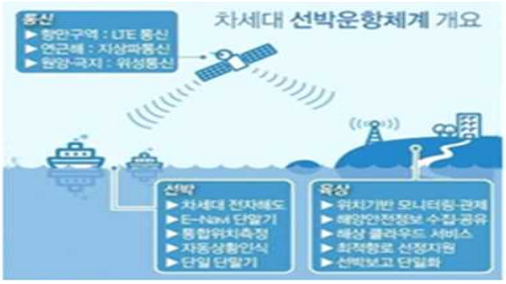
- 아울러, 중국 시장을 겨냥한 유망 상품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고 현지 물류센터·수출-마케팅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수산식품의 한류 붐을 조성하여 FTA 파고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 ◈ 국제규제를 기회로, 新해사산업 육성
### - 선박평형수 세계시장 선점 지원, 한국형 e-nav. 사업 추진

○ 선박 관련 국제규제를 새로운 산업 창출의 기회로 삼는 역발상을 통해 新해사산업을 육성한다.

- 이미 국내기업이 세계시장 점유율 57%를 차지하고 있는 선박평형수 처리기술의 세계시장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 '18년부터 국제적으로 시행예정인 e-navigation 핵심기술의 국산화 및 국제 표준화를 위해 기술 선진국인 스웨덴, 덴마크와 함께 국내 실해역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세계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선박평형수 산업 성장사례> | <한국형 e-Nav. 개념도> |
|---|---|
| |  |

## Ⅴ. 해양관광과 문화가 융성한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 ◈ 인프라 구축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해양관광산업 육성

**- 크루즈 부두 확충, 거점형 마리나항만 사업자 공모, 부산·인천항 항만재개발,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 추진, 낚시산업 육성**

○ 크루즈·마리나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 금년에는 부산북항 크루즈 부두를 완공하고 '20년까지 부산, 인천, 제주, 여수 등 주요항만에 크루즈 부두 8선석 확충을 목표로 인프라를 지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거점형 마리나항만 6개소에 대해 사업자 공모 및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마리나항만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마리나항만 구역내 배후단지(관광·요트산업 집적)의 법적근거 마련 및 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선박대여업·보관·계류업, 레저선박·시설에 대한 분양·회원 모집 근거 마련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부산북항 1단계 재개발 지구의 친수공원 및 랜드마크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매립부지를 비즈니스, 관광·레저, 시민휴식공간 등 국제적인 대규모 종합관광·레저허브로 개발하는 등 대도시 인접 항만재생을 통해 국민 여가공간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영종도 드림랜드> | <부산북항 1단계 재개발지구> |
|---|---|
| | |

- 이와 함께, 어촌지역의 1·2·3차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제2의 새마을·새어촌' 사업을 착수하여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낚시 포털 운영, 친환경 낚시도구 개발·보급, 쾌적한 낚시공간 조성 등을 통해 낚시산업 육성과 함께 어촌 소득원을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중점과제 실천계획과 더불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 3.0, 공공기관 관리 등 정부의 주요 국정 아젠다에 대해서도 신규과제 발굴 및 지속 관리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간다.

○ (일자리 창출) '14년에는 총 5,105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총 1,063개 창출 계획

○ (비정상의 정상화) 뿌리가 깊은 고질적 비정상 관행 13개 과제 해결에 주력하고 민·관 합동 위원회를 통해 과제 지속 발굴 추진

○ (정부 3.0) 14개 공공데이터를 추가 개방하고 매월 30일을 '3.0 Day'로 지정하여 교육·성과발표 대회 등 조직내 가치 내재화

○ (공공기관 관리) 경영성과 협약을 체결하여 성과 중심의 경영을 유도하고, 재무 관리계획 검토 강화 및 낭비요인 구조조정 실시

□ 해양수산부는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국민과 함께 해양강국, 수산부국, 국민행복의 시대를 반드시 열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며, 해수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2014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서면보고)

* 인포그래픽 별도 송부 예정